

월요광장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날마다 새롭게 탄생하는 신조어들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지독한 혐오의 시대를 살아 가는 것일까. 타인에 대한 존중은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실종된 느낌이다. 진지중, 설령중, 맘중... 언어 표현의 수위가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맘중’은 언제부터가 혐오 표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82년생 김지영’(조남주)에도 나온다. ‘나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나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맘중 필자가 샴발자야...’ ‘독박 육아’에 시달리던 젊은 엄마가 오레간만에 커피 한 잔 마시러 유모차를 끌고 나섰다가 하루아침에 맘중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을 그렸다. 혐오의 표적 집단으로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는 흔히 언급되지만 아이 엄마를 표적 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아이 엄마의 이미지가 예의 없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혐오는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이다.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 별 근거가 없다고 무시해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오랜 기간 인종차별이 통념이 되고 이데올로기화 되면서 단단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과 같다.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행동 하나하나가 지적당할까 두렵고 자기도 모르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위축된다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맘중이 되지 않기 위해, 개념녀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혐오의 부정적 효과다.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건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면 과연 존엄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민감하고도 타박할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발언하는 게 더 옳은 일이 아닐까.

‘말이 칼이 될 때’를 쓴 홍성수 씨는 혐오 표현의 해악은 정신적 고통과 공존의

파괴에 있다고 말한다. 아이 엄마를 진짜 벌레 취급하는 식의 현실이 닥쳐올 수 있다. ‘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저들을 반대한다’가 되고 ‘저들을 반대한다’가 ‘저들을 박멸하자’가 되는 건 순간이다. 그는 아이와 엄마에 대한 혐오를 실행에 옮긴 것이 ‘노키즈존’이라고 말한다. 어떤 특정 집단을 지정해 배제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대상 서비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자로서 느끼는 부담도 다르지 않다. 어린이용 식기와 의자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아이는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흘리고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꼭 노키즈존이어야 하는가, 아이의 출입을 원천 봉쇄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질문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우리 사회가 과연 아이와 아이 엄마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는가, 아이와 엄마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다.

누군가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

는 것은 어렵고도 섬세한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믿음과 공공선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준다. 함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 엄마를 맘중이라 조롱하기 전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어머니의 정성과 노동, 견딜과 눈물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 세상에 ‘맘중’이라고 불릴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와 엄마가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와 엄마를 환대하는 공공시설과 대안 공간들, 대항 표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공존의 사회’를 위하여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는 거울이면서 거짓이다. 삶을 비추기도 하지만, 삶을 비틀기도 한다. 삶과 조응하기도 하지만, 삶을 조롱하기도 한다... 한(韓)국이 국민의 표준을 지정할 때, 표준에 끼지 못한 사람은 한(俄)국에 산다.” (‘응크린 말들’, 이문영)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社說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공공교통 혁신 계기로

광주 도시 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정적자와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16년간 논란만 반복해 온 만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 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용섭광주시장의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시민 의견 463건을 분석한 결과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 시민들은 2호선 건설로 1호선을 보완해 공공 교통의 혜택이 도시 전반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지난 2014년 공론 과정을 거쳐 원안 추진을 결정한 데다 최근 차량 선정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 만큼 사업 포기 편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2호선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시민 단체는 최근 공사 방식을 지하를 낮게 파는 기존 ‘저심도’에서 도로 가운데 철

로를 까는 ‘노면 전차’나 도로 중심부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론 과정을 다시 거쳐 시민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들여보자는 취지다. 이들 방안은 시설비는 절감할 수 있지만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2호선은 지난 2002년 기본 계획 승인 이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노선과 건설 방식을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그 과정에서 1호선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외곽 거주 시민의 승용차 이용이 급증하는가 하면 도로 설치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지양해야 한다. 수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합리성에 근거해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도시 철도와 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고 광주만의 혁신적인 공공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18 당시 수류탄 사용 사실 끝내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수류탄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각종 군 문서에도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들이 한사코 수류탄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발뺌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를 유혈진압했던 계엄군이 당시 민간인이 탄 고속버스에 수류탄까지 투척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용 장소와 시간이 적힌 군의 문서가 드러난 것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단독 입수한 계엄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를 살펴보면 '1980년 5월 21일 새벽 00시36분, 조선대 정문, 3000명이 차량 3대로 정문 돌파 시도. 그 중 1대는 담을 들이받고 정지. 고속버스 1대 수류탄의 저지로 민가를 들이받고 정지. 폭도 3명 검거'라고 적시 돼 있다. 수류탄을 진압에 사용한 부대는

당시 조선대에 주둔했던 7공수특전여단이다.

수류탄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현황은 1982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戒嚴史) 등에 나온다. 계엄사는 수류탄 파편 희생자가 12명이라고 밝히면서도 시위대의 오발 사고로 발생했으며 계엄군은 수류탄을 투척하거나 사용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자료로 미뤄 이 같은 기록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끝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계엄군의 수류탄 사용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광주에 투입된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감춰진 진실’이 앞으로 보다 많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송창운 변호사

미스 함무라비

상대방이 배신(자백)하는 경우, 나도 배신(자백)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임 이론의 실험 결과를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의 구현에 효과적인 것 같다.

이야기가 많이 엮여있다. 요사이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중이다. 현직 부장 판사가 쓴 소설을 토대로 만든 드라마인데, 판사가 주인공이다.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여럿이지만, 판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별로 없고, 검사·경찰이 주인공인 드라마인 경우 비현실적인 설정이 많아 현실감이 떨어져 그리 볼일할 수 없던 차에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소설도 펴 보았다.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모두 다 흥미롭지만 다시 보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예견한 듯한 에피소드도 있어 짝짝 놀랐다.

‘헬조선 항공의 풍경’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주인공박차오름 판사의 대사를 통해 지금 한창 문제 되고 있는 항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거의 모두 다 예언했다. 일감 몰아주기, 회사 비용으로 오너 일가의 가정부·운전기사·안마사 월급 지급하기, 법인 카드로 개인 생활비 지출하기 등의 문제점들을 말았다. 아니 놀린 것도 있다. 수입 제철 과일 밀반입 같은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을까.

소설 중간 중간 ‘판사의 일’이라는 코너를 통해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시사 썰렁한 이야기나 재판예우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그 중에는 좌배석, 우배석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변호사 개업 초에는 내가 봤을 때 재판장의 왼쪽에 앉아 있는 배석판사가 좌배석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향성이 아니라 재판장의 입장에서 좌·우를 가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방향성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전관예우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라도 공정에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소설에 등장하는 브로커는 실제로 썩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썩은 것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앞서서 사고 쳐주는 사람들이 신문을 장식해 주지 않느냐고 말한다. 지금 지난 대법원 시절 있었던 일들로 시끄러운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냥 흘려보내기만은 어려운 대목이 아닐까 싶다.

드라마와 책을 통해 판사와 법원 직원의 고뇌, 번민, 생활 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재미도 있었다. 시청률이 높아지거나 책이 많이 팔려도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읽게나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다.

기고



이상옥 (사)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

예멘 난민 보듬고 감시다

명, 특정 구성원 4255명, 인종 2641명 등이다. 하지만 난민 인정자는 839명으로, 난민 통과 확률은 불과 2% 밖에 되지 않는다.

광주대학교 음비 교수가 인정받은 난민인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난민 인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은 사람은 1540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자로 예멘을 무사중 불허 국가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헌 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을 보니 숨이 막힌다.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과 인민군 사이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음을 안다. 이러한 끔찍한 참상을 아는 한국 사회가 이들을 내몬다면 지구촌의 비난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난민법도 제정되어 있어 이번 예멘인들도 유엔 협약과 난민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을 철저히 통제하는 국가이다. 한국 사회가 예멘 난

민 500명을 받아들 수 없을 만큼 불안한 사회인가?

특히 일부 보수 개신교의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성경은 유대 민족의 난민 시절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 2000년을 떠든 그들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는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 난민을 보듬지 않고 배타시키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800만 명에 이르는 해외 동포의 절반이 난민의 자손이라 한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만주, 러시아, 중국으로 떠났던 선조 난민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난민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았던 한민족이 왜 이렇까? 제주를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잠시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고 일할 기회만 주면 모두 고마워할 것이다. 또 예멘 내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구촌은 다문화 사회로 변하였고 민족과 종교, 이념과 사상이 달라 차별 받는 시대가 저물었다. 세계 경제 10위 국가라 외치는 한국이 예멘 난민 500명으로 호들갑 떠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명, 특정 구성원 4255명, 인종 2641명 등이다. 하지만 난민 인정자는 839명으로, 난민 통과 확률은 불과 2% 밖에 되지 않는다.

광주대학교 음비 교수가 인정받은 난민인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난민 인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은 사람은 1540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자로 예멘을 무사중 불허 국가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헌 청원이 6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을 보니 숨이 막힌다.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우리는 6·25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과 인민군 사이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음을 안다. 이러한 끔찍한 참상을 아는 한국 사회가 이들을 내몬다면 지구촌의 비난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난민법도 제정되어 있어 이번 예멘인들도 유엔 협약과 난민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을 철저히 통제하는 국가이다. 한국 사회가 예멘 난

無等鼓

유교의 사서(四書) 가운데 하나인 중용을 보면 “공자는 위로는 천시(天時)를 따르고 아래로는 수도(水土)를 좇았다”는 말이 나온다. ‘수토를 좇았다’는 것은 자연에 순응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주자는 “풍토(風土)를 따름으로 인(仁)을 돈독하게 한다”고 했다. 환경에 맞추는 것이 인성을 함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에 관심이 많았다.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물이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세를 거처하기 좋은 곳으로 여겼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을 역임한 최원석 박사는 ‘우리 풍수의 인문학’에서 한국 풍수의 특징을 ‘생활 풍수’로 규정한다. 그는 ‘좌청룡우백호’ 같은 기록보다 마을 고유의 설화나 풍수와 관련된 자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풍수는 문화 생태적 관점으로 확장된다. 문화경관의 입지와 장소성 등에 영향을 준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환경 관리와도 맞물려 있다. 이는 역사, 문화,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남아 있는 풍수의 흔적

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준다. 풍수 담론이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과 일상에 투영돼 있었기에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도시철도 2호선, 아등산 관광단지, 빛그린산단, 광주공항 이전 등은 오래된 숙원들이다. 이러한 문제가 원점에서 맴도는 것은 예산, 공론화, 지역 이기주의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창의적 실천의 정수’인 풍수를 지혜롭고 현실있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다.

향후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이라는 가치 아래 능동적으로 환경 조건을 개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적으로 풍수에 입각해 어떤 것을 결정하지는 말은 아니다. 좋은 풍수, 좋은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원석 박사는 풍수는 “마음 명당은 맘먹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 속에 틀고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선출된 공직자나 버거운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새겨들을 만하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풍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 사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